

<정책토론회>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2022년 6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자유기업원



여야의 과도한 입법 경쟁!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

2022. 6. 23. **목**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유튜브 '시사포커스TV' 생중계  국회방송

시간	내용
10:00 ~ 10:10	개회, 국민의례
10:10 ~ 10:25	인사말, 축사
10:35 ~ 10:55	주제발표 :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국회 입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
10:55 ~ 11:55	<종합토론> 좌 장 :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자 : 김성호 부원장(자치법연구원) 강성진 정책위의장(한반도선진화재단) 곽은경 기업문화실장(자유기업원) 하민상 법무담당관(행정안전부) 이상수 법제조정총괄법제관(법제처) 전진영 정치의회팀장(국회 입법조사처)

주최 **홍석준 의원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관 **한반도선진화재단, 자유기업원**

후원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회입법조사처

축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량의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 들어서 더욱 더 많은 양의 법이 발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여년전 12대 국회 당시 발의된 법안이 370여건이었지만 21대 국회는 현재 추세로 볼 때 45,0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에의 경우 지난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1번의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평균 47.8건의 법안이 처리되어 보통 1건 정도에 불과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차이가 큼니다. 상임위별 법안소위에서 1건의 법안을 심사하는 시간도 20대 국회는 13분으로 17대 국회의 23분과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과연 얼마나 더 많이 처리될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 꼽아야 할 것입니다. 법 발의 및 통과 횟수 자체를 실적으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세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한해에 발의 되고 통과시키는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법안들이 단순한 문구를 수정한 것이어서 입법활동에 대한 올바른 평가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수많은 발의안들이 과연 많은 숙고와 논의를 거치고 발의되는지, 그리고 치열한 토론을 거치고 통과되는지는 겉입니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민의 삶을 옳아매는 많은 법안들이 국민 경제와 기업 활동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법안 발의 수, 통과 개수를 가지고 의정을 평가하는 것도 이러한 법안 양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현상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지 법안 그 자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실적은 법이 발의, 통과된 횟수가 아닌 법이 담고 있는 내용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조항을 몇 개 고쳐서 발의하는 일이 만연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특히 법은 단 한 개를 만들 때에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법 하나하나가 제도뿐만 아닌 민생, 때로는 국민의 생명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에 있어 발의 횟수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관해 논의가 활발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는 새로운 시대와 과제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홍석준 의원님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여러 단체가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이승길 아주대 교수님과 토론자 6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 과제와 개선책을 말씀주실 것입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 입법과 관련한 국회의 각 분야 관계자들이 전문가들의 제언과 토론을 듣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기업원 원장

최승노

정책토론회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4차 산업혁명시대)

국회 입법개혁의 과제와 전망

2022. 6. 23(목)

이승길 교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목차

1	문제의 소재 – 국회의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2	시대전환과 사회시스템의 변화
3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4	국회의 입법과정
5	정부 규제정책 평가

1. 문제의 소재 : 국회 입법 폭주 이대로 좋은가

◆ 국회의 입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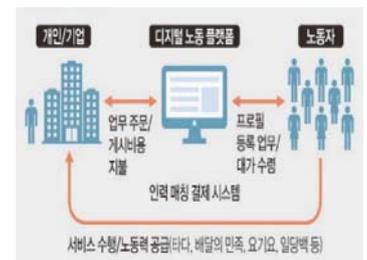
- ① 여야의 **과도한 입법 경쟁**,
- ②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을 위한 법률안 만들기 풍토가 지배하는 실정
- ③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④ 합리적인 관련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 토대

3

2. 시대 전환과 사회시스템의 변화

◆ 기후위기/4차 산업혁명저출산-고령화/코로나 팬데믹 영향- 패러다임 전환

- 세계/국내 경제 변화 - 기업 경영 여건 급변
- 산업구조 재편 및 일자리 변화 확산
(실업, 고용 불안정, 소득 불평등)
- 로봇화, AI/디지털전환/**플랫폼 노동**-고용 감소, 질 저하
(실업, 빈곤, 질병, 장애)
- 노동의 사회적 가치 재정립 고용창출, 사회보험(보장) 개편
- 정부(국민국가)-시장(산업경제)-시민사회
= **사회구조의 융합적 양상 진단**
- 의사소통의 거버넌스 - 디지털 시대의 **행복사회**



4

❖ 4차 산업혁명



5

2. 시대 전환과 사회시스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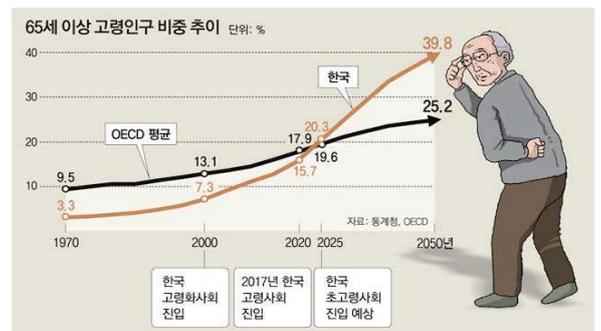
◆ 불안정적인 국정 환경

- 국외 : 세계경제 침체, 패권 경쟁과 국제 분쟁, **코로나 19 팬데믹** 지속, 북한 핵 개발, 우크라이나 전쟁
- 국내: 디지털 전환, 사회 양극화 심화, 정치사회 갈등 심화, **고령화 · 저출산 · 수도권 집중**



◆ 국민의 요구 가치

- 건강, 친환경, 안전, **좋은 일자리**
- 공정, 쉐신, 글로벌 확산 등



6

2. 시대 전환과 사회시스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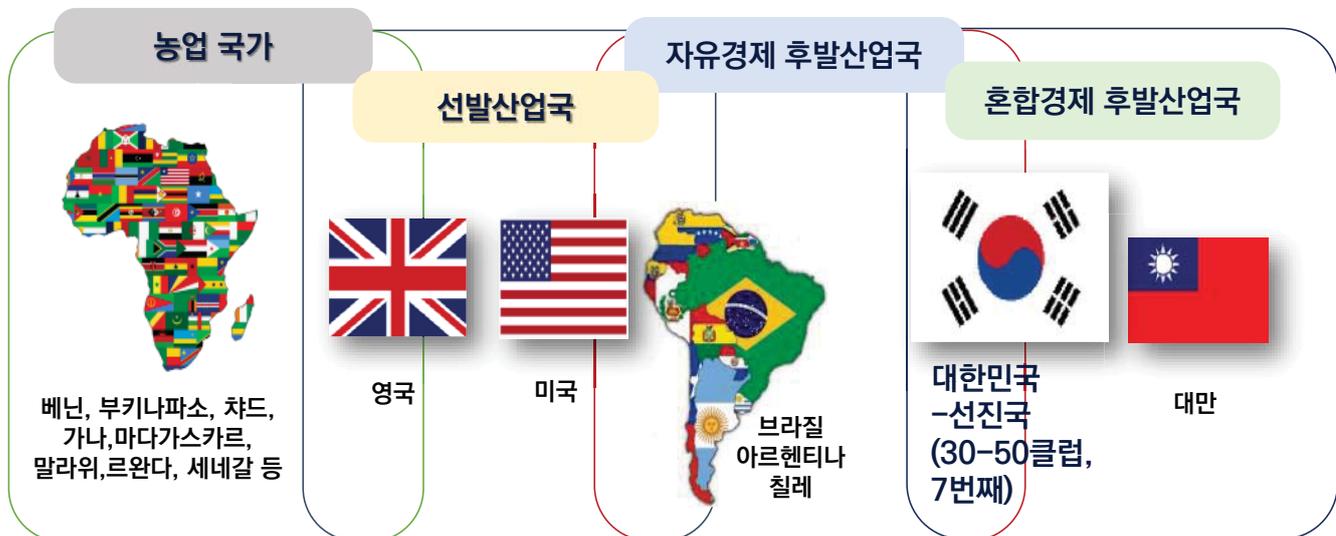
- ◆ 정권/세력/체제 교체 : 윤석열 정부 (2022.5.10-)
- 경제 상황 ⇒ **경제위기 - 국가체제 구축** ⇔ '민생'
 - ① **제도의 정합성과 정통성 - 전체 사회시스템과 조화**
 - ② **기술변화-기술혁명-시스템의 혁신 - 고용창출 - 국가와 기업 흥망**
- ◆ **정부·국회** 역할 : 법과 제도, 의식과 관행 변화



7

❖ 국가경제 발전의 기본원리

◆ 국가경제 발전의 역사적 사례



8

3.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 기본방향

- ◆ 경제위기 : 경기침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대응 체제'
- ◆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2022.6.15)
 - ① 민간중심 역동경제 : 경제운용 중심축 전환 : 정부⇒민간
 - ② 체질개선 도약경제 : 5대 부문 구조개혁
 - ③ 미래대비 선도경제 : 과학기술산업 혁신, 인구위기 대응 등
 - ④ 함께가는 행복경제 :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생산적 맞춤형 복지

9

3.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추진 의지

- ◆(목표)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한 후,
 - ① 물가 안정(물가, 금리, 환율, 부동산 등)
 - ② 경제 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
 - ③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의 **경제 전쟁 대장정** 출발

- ✓ 법인세 최고세율(25%⇒22%), 기초연금 인상 (30만7000원 ⇒ 40만원), 유류세 인하 폭 확대
- ✓ 규제와 인허가 지연 : 기업 투자, 337조원(투자 애로사항-실태조사)
- ❖ 경기침체 - 감세 - 국가 채무 증가

10

3.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5대 부문 구조개혁, 당면 현안 대응

◆ 5대 부문 구조개혁 - 경제 기초체력/체질 변화 시도

- ① 공공/연금 개혁-법적 불확실성 해소(중대재해처벌법)
- ② 노동시장 개혁-근로시간제도 합리적 개편,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전환·확산,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 논의 추진
- ③ 교육 금융 혁신
- ④ 서비스산업 혁신

◆ 당면 현안 대응 ⇒ 민생 안정, 리스크 관리

- ✓노동개혁-규제개혁 투자 * 화물연대 파업
- ✓반도체 공장 신설-용수/전력 인프라
- ✓반도체 학과 증원 확대 ⇒ 교수/시설 확충 시도

4. 국회의 입법 과정 - (1) 개관

◆ 입법 과정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법률 제정 절차

- ① 법률안 제안권자
 -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함(헌법 40조)
 - ❖ 의원입법(국회의원, 위원회), 정부입법
- ② 법률안 입안
 - ✓국회의원 > 정부 제공 > 제3자(연구원/특정단체/기관/협회/노동단체 등) > 소속 정당(정책부서)
- ③ (요청시) 법제실 검토, 비용추계서 작성(예산정책처)
- ④ 법률안 국회 제출 및 회부(소관 상임위원회 송부, 18개)
- ⑤ 국회 심의/의결
- ⑥ 법률안 정부 이송 및 공포

4. 국회의 입법 과정 - (2) 법률 제안권자

◆ 법률 제안권자

- 시대 변화에 따른 보완 입법
 - 대선·총선의 정책 공약(‘국정과제’) 실천의 입법과제
 - 언론보도-법적 미비사항, 현장 문제로 사회 이슈(*무더기 입법)
- ① 의원입법 : 의원 개인(발의자 포함 10명 의원)
 - ② 의원입법 : 정당 차원(*정책위원회, **당정 협의**, 당론<대표발의자-공동발의자>)
 - * 위원회 대안, 위원회안
 - * **정치 현실 : 21대 국회 여소야대** (300명 = 107(국민의힘):180(더불어민주당))
 - ③ **정부입법**- 중앙행정기관별 추진
(부처별 담당과, 관련 연구기관/단체 용역, 전문가TF운영)

13

4. 국회의 입법 과정 - (3) 의원입법

①+ ② 의원입법 - 국회 제출 법률안의 입안 과정

- 회기와 관계없이 폐회 중 제출 가능(다만, 일사부재의 원칙)
- 소요기간 ?
 - **의원(위원) 대표발의**(발의 요건 : 10명 이상 찬성 * **도장 품앗이**) - 소관 위원회, 특별위원회
⇒ (필요시 : 공청회/청문회 개최)
 - ⇒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기초(**법안심사 소위원회**/***(수석)전문위원 활용**) 심사
 - * 전문위원 - 검토보고(능률적 심사 -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 * 의원(위원) : 지역/직능/특정 정당·정파 - 대의제 민주주의 한계
 - ⇒ 위원회 제안 (비용추계서 첨부)
 - ⇒ (의견제시) 의결
 - ⇒ 국회의장에게 제출

14

4. 국회의 입법 과정 - (4) 정부입법

③ 정부입법 - 정부 제출 법률안의 입안 과정

-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매년 1.31)
- 절차 복잡 - 소요기간 수개월 및 1-2년
 - 담당자 초안(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비용추계서/자원조달 계획서)-부처내 의견조정
 - ⇒ 관계기관 협의(*관행상 만장일치)(+당정 협의(사실상 합의))
 - ⇒ (입법 예고(40일))
 -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규제영향분석서 첨부, 부패영향/정책통계기반 평가)
 - ⇒ 부처 원안 확정
 - ⇒ 법제처 심사 (법률안의 자구/형식/체계, 내용의 타당성)
 - ⇒ (차관회의 : 긴급시 생략)-국무회의 심사
 - ⇒ 대통령 서명(국무총리/관계 국무의원 부서)

15

4. 국회의 입법과정 - (5)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 법률안 발의건수(정량평가) : 언론 보도/정당-중앙당 공천 잦대

- ① 상호 법률안 베끼기
- ② 폐기된 법률안 재활용 (*임기 만료 폐기)
- ③ 무분별한 공동발의 등
- ④ 한건주의 (노인 (어르신 비하)) ⇒ 실버



❖ 의원 의정활동 최우수 의원

✓ 법률안 발의 (발의요건 : 발의자 포함 10명)

* 서명작업 (의원간 진영논리 강화, 친소관계-단독방 활용)

- *도장 품앗이 (도장 인심-법의 안정성 해침)

➤ 청부입법/차명입법 현상 : 정부 입법 ⇒(신속한 처리) 의원입법 둔갑

* 한국 정치의 특이한 현상

16

5. 정부 규제정책 평가

◆ 규제 : 이해관계자의 '기득권 재분배'

➤ 공무원 위험 부담 회피

❖ '그림자 규제'

➤ 규제 당국의 (법령이 없는) 행정지도, 심사지침, 구두지시 등

✓ 행정 편의로 기업 규제, 인허가 지연

17

5. 정부 규제정책 평가

❖ 되는 게 없는 나라, 안 되는 게 없는 나라

- ① 송현동 7성급 호텔
- ② 케이블카 등 산지관광 인프라
- ③ 국립공원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
- ④ 화옹반도 동부 유리온실, 새만금 LG스마트농장
- ⑤ 원격진료, 각종 wearable 의료기기
- ⑥ 줄기세포의 치료, 일본 가능
- ⑦ 외국인 전용병원을 왜 donation으로 지어야?

- ⑧ AI 기초인 빅데이터 산업과 개인정보 보호
- ⑨ 드론 산업
- ⑩ 핀테크 산업: 중국 거지도 QR코드로 적선
- ⑪ 대형 소매점 규제와 해외 직구
- ⑫ KDI Pimac의 예타 조사, 무차별적 면제
- ⑬ 경부고속도로, 포철, 자동차 타당성 없음
(예) 세종시 KAIST 의과대학원

18

5. 규제정책 평가

◆ 법시행령 – 신속한 추진 or 입법 완박 ⇒ 내로남불?

- ① 시행령 – 전력산업기반기금(원자력 홍보 ⇒ 신재생 에너지 홍보)
- ② 검찰청시행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③ (당정 협의)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 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 4,602건 (25% 증가) * 박근혜 정부 : 3,667건

5. 규제정책의 평가

◆ 규제 숫자로 증가? 입법, 행정부, 기득권, 국민의 무지인가?

- ❖ 체감 못해
- ❖ 규제의 질, 콘텐츠 중점
- ❖ 누구의 책임인가 – **정권의 비겁함**

◆ 규제 개선 추진 – 실제 권리 제한, 의무 부과

- ① 규제영향 평가과정 : 문제 규제 발굴, 조사/분석-논의 후 개혁 방향 도출
- ② 기존 이익을 향유하는 기업·단체를 설득-수용 과정
- ③ 전문인력+예산 대거 투입 :
 -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설득·합의 전략적 접근
 - 승진 체계, 목표 등 규제완화 친화적인 인센티브시스템으로 전환

이성길

Lee Seung-Gil
Sglee79@ajou.ac.kr
010-4766-7324

(4차 산업혁명시대) 국회 입법개혁의 과제와 전망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

I. 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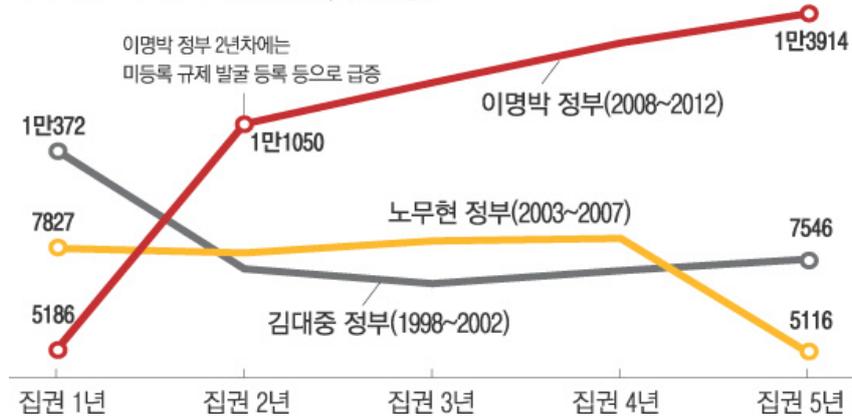
- 이승길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현재 한국 국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회 입법 폭주가 이대로 좋은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 국내외 불안정한 국정 환경에서 국민의 요구 가치는 건강, 친환경, 안정, 좋은 일자리, 공장, 쇠신, 글로벌 확산 등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함.
-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법률제안권자는 의원입법(의원개인, 정당차원) 및 정부입법(중앙행정기관별 추진)으로 되어 있음.
- 국회의 의정활동은 법률안 발의 건수(정량평가)로 평가됨으로 인하여 상호 법률안 베끼기, 폐기된 법률안 재활용, 무분별한 동동 발의, 한건주의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국회의 입법 과잉 문제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규제정책과 연계되어 있음
- 문재인 정부 규제건수는 4,602건으로 박근혜 정부의 3,667건에 비해 25%가 증가한 것임.

II. 토론문: 과잉입법과 과잉규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침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됨

- 이승길 교수의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국회에서의 과잉입법은 의원 입법과 정부입법의 형태로 제안되며 의원에 대한 평가가 입법제안의 수라는 정량적인 평가로 국회에서의 과잉입법은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의 해소없이는 기존의 과잉입법 현상을 피해 나갈 수 없음.
- 이러한 과잉입법은 필연적으로 과잉규제와 연계될 수 밖에 없음. 입법의 대부분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며, 비록 입법이 규제완화로 가더라도 또 다른 규제가 생기거나 중앙부처에서의 규제완화가 지방정부에서의 규제완화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음. 이러한 현상은 어느 정부에서나 규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음.

- 역대 정부에서 규제건수를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과격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IMF 등 외부로부터의 규제완화 요구와 국내 경제활성화 차원으로 자발적인 개혁이라고 볼 수 없음.

역대 정부 규제 추이 단위:건수, 자료: 전경련



자료: 경향신문, 2014.03.32.

- 정량적 평가에 의한 국회의 성과평가제도가 지속되고 있는 한 현재의 과잉입법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임. 이는 곧 과잉규제로 연계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 한국의 법률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 즉, positive형, 사전적 규제에서 negative 형, 사후적 규제체계로 법률체계의 변화가 필요함. 이러한 법률체계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경우 모든 법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실현되기 불가능함.
- 현재의 포지티브형 법률체계 즉, 규제체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을 통한 새로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고 빠르고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능함. 특히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때 마다 기득권층과의 갈등로 이어져 현재의 포퓰리즘적 정치체계하에서 새로운 산업 특히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어려울 것임. 예를 들면 우버, 에어비엔비, 자율주행차 시험이 데이터 공유문제로 어려움 등 한국에서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음
-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법에 대한 평가제도, 입법체계의 변화 기득권과의 갈등 해소 방안,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입법 및 규제 행태 등이 해소되어야 가능함

과잉입법 해소과제와 합리적 방향

곽은경(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

급증하는 의원발의

의원발의 입법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법안발의는 정부발의와 의원발의가 모두 가능하지만,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다. 21대 국회 전반기를 기준으로 총 1만 5322의 법률안 중 의원발의가 1만 4831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비율은 25.33%인 3,571개이고, 정부제출법안의 가결비율은 52.95%(260개)였다.

<역대 국회기간 별 법안제출 추이>

역대 국회기간	법률안 총계	의원발의	정부제출
14대(1992~1996)	902	321	581
15대(1996~2000)	1,951	1,144	807
16대(2000~2004)	2,507	1,912	595
17대(2004~2008)	7,489	6,387	1,102
18대(2008~2012)	13,913	12,220	1,693
19대(2012~2016)	17,822	16,729	1,093
20대(2016~2020)	24,141	23,047	1,094
21대 전반기(2020~2022.5.29)	15,322	14,831	491

*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연합뉴스 재인용

시민단체와 언론이 법안발의 숫자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의원들의 법안발의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최근 법률소비자연맹이 21대 국회 전반기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법안 발의 숫자가 많은 의원, 법안 통과율이 높은 의원 등 발의안 숫자를 기준으로 줄을 세웠고, 언론은 이를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해외와 비교해도 의원발의 법안 수치는 높은 편이다. 프랑스 의원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834건, 일본 의원들은 2009년부터 2012년에 253건, 독일 의원들은 2005년~ 2009년 사이 431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외 국가들보다 더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의 전반기 기준으로, 의원들이 대표발의 법안은 1인당 47.3건, 지난 2년간 매달 2개씩 발의한 셈이다. 공동발의는 평균 564.9건이라고 한다. 1천건 이상 공동발의한 의원도 다수, 2천 건 이상을 기록한 의원도 있다. 의원 발의안들의 내용 중 단순한 자구수정, 여러 법안을 묶은 재활용 법안들이 대다수라 법안 발의실적을 부풀리기의 목적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발의안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내용

너무 많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제정, 개정되고 있다. 2021년 3월 24일 하루 동안 국회에서 165건의 법안(의원발의 158건)이 통과됐다. 12월 9일에는 107건(의원발의 98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이 우리사회의 일종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준수해야 할 법이 너무 많거나, 또 수시로 바뀐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국민들의 삶에 제약이 될 우려가 크다.

특히 늘어난 법안들이 포퓰리즘 법안이거나, 당리당략, 진영논리에 따른 법안들이 많다면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의원의 다음 해 공천에 '대표 발의 법안 수'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자 2019년 10월 31일 하루에만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 181건이 접수된 것이 대표적 예이다.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사익추구를 위한 법안 발의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숫자가 아니라 법안의 내용이다. 국민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 기업활동에 큰 장애요소가 되는 규제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될 우려가 크다. 21대 국회의 전반기 성과를 보면 시장

친화적인 법안 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 일부 시장친화적인 법률안이 통과되는 동안 더 많은 규제법안들이 생겨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주대표소송제, 노동이사제 등 기업경영에 큰 위협이 되는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타다금지법처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도 생겨났다.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이 중요하다.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규제를 완화하고, 친시장적인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당장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주는 임대차3법, 기업의 경영할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원격의료 규제, 모빌리티 규제, 대형마트 규제, 도서정가제 등등 일자리 창출을 막고,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규제를 걷어내는 방향의 입법이 필요하다.

과잉입법 벗어나 법다운 법 만들어야

지금의 과잉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입법평가절차나 규제심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의결하면 무조건 법률이 된다는 접근법 대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에 어긋나는 방향인지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는 절차로는 부족해 보인다. 본 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실적채우기용 입법은 아닌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어떠한지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 예로 전통퀵보드 면허를 13세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범시행 이전에 16세로 상향시키는 개정안을 낸바 있다. 해당 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 여론, 관계자들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에 생긴 사건이었으며, 소비자들, 관계업체들은 큰 혼란과 피해를 겪었다. 발의한 의원이 해당 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에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과잉입법을 막을 수 있겠다.

또한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법안의 양적평가 대신 질적평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시장친화적인 법안을 기준으로 평가해 국민들에게 얼마나 선택할 자유를 주었는가, 기업에게 경영할 자유를 주었는가, 국민소득이 얼마나 높아지고,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어졌는가 등 평가의 잣대를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법다운 법이 만들어질 수 있다. (끝)

KB 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어디든 떠날 그날을 위해,
마일리지 두둑하게
쌓아두세요!

KB국민 스카이패스 티타늄 카드

국내외 1천원당 1마일 기본적립
해외/면세점 1천원당 1마일 추가적립(총 2마일)



• 연회비: 국내, 해외겸용 4만 5천원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2-C2b-01293호(2022.02.25~2023.02.24)
• 연체이자율: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 최고 연 20%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적용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 KB 국민카드